

긱은 일 도맡는 소중한 일꾼인데... '눈물의 타국살이'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5만명
우리의 '이웃' 맞습니까

〈상〉 외국인 없는 산업현장 스톱

광주·전남 외국인 노동자는 5만명을 넘는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지역 산업현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젊은층 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지역의 농·산·어촌 현장은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웠고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그들은 이제 지역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웃'이며 '동료', '가족'이기도 하지만 이들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광주일보의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의 '사회적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공존하기 위한 '광주전남 외국인 노동자 5만명 시대. 이웃 맞습니까' 시리즈를 3차례에 걸쳐 싣는다.

차별·폭력 속 여전한 이방인
농산어촌·제조·건설업체 등
외국인노동자 없으면 현장 멈춰
인구 감소·고령화 속 필요 인력
우리 이웃으로 따뜻하게 감싸야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가 5만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100만명에 달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농·수·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각각 7515명, 1만 9095명으로 2만66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수는 훨씬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바 불법체류상태로 머무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5만명이 넘는 것이라는 얘기다.

광주·전남지역 고용보험 가입자가 68만

여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산업현장의 6% 가량을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떠맡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중은 훨씬 높다는 게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들 설명이다.

당장, 광주·전남지역 농·수·축산업 등 주요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화순지역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일하는 20명 중 13명이 캄보디아 노동자들로서, 이들이 없으면 사실상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게 농장주 설명이다. 화순 도곡산단 일대 재생타이어 공장이나 파프리카 농장 등에서 일하는 화순지역 외국인 노동자도 400명이 넘는다는.

완도에서는 다시마·전복양식 어민들이 올 초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95명)들의 입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지면서 하루 7~8만원 수준인 인건비가 11만원까지 치솟았다.

농·수·축산업 뿐 아니다. 제조업계도 마찬가지다. 광주 하남산단 내 금형제작 공

장은 전체 노동자 3분의 1인 인도네시아와 네팔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도로 포장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일곡지구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빠지지 않는다. 광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7515명 중 5702명이 광산구에 몰려 살고 특정 지역은 외국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지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광주 지역 경우 지난 2011년 6021명이던 외국인 노동자는 올해 7515명으로 20% 늘었다. 1만1000명(2011년)이던 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올해 1만 9095명으로 43% 급증했다.

반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산업 현장의 한 축을 떠맡고 있지만 이들과의 공존하고 공감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수의 이방인으로 취급,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며 인권침해 행

태도 끊이질 않으면서 기본적 인권 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광주지역 이주노동자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실태조사서는 지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조사서는 근무 중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가 201명으로 전체의 54.5%에 달했다.

이들과 매일 부대끼는 한국인 사업장 동료(35.3%), 사업주(17.9%), 사업주 가족(10%) 등이 가해자였다. 이들에게 도움을 받고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폭력(52.2%), 신체적 폭행(10.9%), 성희롱(5.5%), 성추행(2.5%)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지난해 3월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아리핀(21·가명)씨는 해남지역 김양식 어가에 취업했다가 2달도 못돼 쫓겨났다. 양식장에서 일한 지 한 달 가량 지났을 때 정박하는 배와 배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새끼손가락을 잃었는데, 사장은 한국어도 서툴고 일

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진 아리핀씨를 계속 채용하지 못하겠다고 내보냈다.

아리핀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인 탓에 산업 재해 승인을 받지 못하고 양식장을 떠나야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따른 대책도 미흡하다.

농·어업 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아 사업주와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부작용이 잇따르는 실정지만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지역 노동계 시각이다.

광주민중의집 김준호 변호사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언어적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등이 맞물려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특히 외진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관련 증거 등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등 농·어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지역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도 가해자도 나이 어려졌다

광주지역 아동·청소년성범죄 중 피해자 연령대는 13세 미만이 가장 많고, 가해자는 19세 미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해바라기센터가 개소 15년을 맞아 분석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성범죄 상담사례에 따르면 15년 동안 총 2754명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 총 8만 6646건의 의료·법적·심리지원 등이 이뤄졌다.

이중 13세 미만 피해자는 1609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59%에 달해 저연령층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 가해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9세 미만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63.6%로 10년 전(2005년~2009년) 33.7%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가 지난 10년(2005~2014년) 동안 64.4%에서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78.3%로 증가했다. 가족과 친족, 도래, 선후배

로부터의 피해는 최근 5년 간 8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소문,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용(전남대병원장) 광주해바라기센터장은 "앞으로 센터는 폭력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해진 피해 유형에 대해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진심을 담아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하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연평해전 18주년 29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사해수호관 광장에서 실시된 제2연평해전 18주년 기념행사에서 2함대 지휘관 및 유가족들이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해군2함대 제공>

"지시 안따른 재소자 해 끼칠 우려 없다면 분리 수용 위법"

법원 "교도도 정신적 손해 책임"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재소자들과 분리해 수용하고 실의운동 등을 제한한 교도소측 처분은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5만원 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순천교도소에서 수용자복상을 입지 않고 있다가 착용하라는 교도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일정 기간 다른 재소자들과 분리해 수용됐고 실의운동이나 공동행사 등의 참가를 제한한 교도소측 처분이 위법하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또 안구 건조, 충혈 등으로 개조해 사용했던 수면용 안대를 무단으로 폐기한 교도소측 처분에 대해서 200만원의 손해 배상도 요구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수용자복 상의 착용 지시를 어겼다면 분리해 수용하고 실의운동 등의 처우 제한 처분을 내린 교도소측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형 집행법 시행규칙상 '허가없이 변조한 물품'이라며 A씨가 개조해 사용했던 수면용 안대를 폐기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심은 130만원(분리수용 110만원·안대 폐기처분 20만원)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75만원(분리수용 55만원·안대 폐기처분 2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고 손실' 박병중 전 고흥군수 사전영장 청구

광주지검 순천지청(3부장검사 유진승)은 박병중 전 고흥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군수는 2015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수억원의 이득을 쥐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군수는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앞서 고흥군청 공무원 A(60)씨는 사기와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른 직인 B(49)씨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지를 사들

인 뒤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팔아넘겨 3억5000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군수가 이들과 공모해 군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여 개국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세 아동 5세 이상 저소득층 1만 4000여 명 지원
- 65세 이상 초·중·고생 10만 명 지원
- 저소득·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돕는 지원센터 설치
- 고산·가파 등 고령·취약 계층에 무료·무이자 대출
- 3~4세 아동 5세 이상 저소득층 1만 4000여 명 지원
- 65세 이상 초·중·고생 10만 명 지원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p>문흥지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p>운암지점 528-4150</p>	<p>운암산지점 513-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침단지점 576-4150</p>
----------------------	----------------------	----------------------	-----------------------	----------------------	----------------------